



한농연 일선 조직 회장님께 올리는 글

존경하는 한농연 시도, 시군구, 읍면동 회장님!

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맞장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무시된 채 한-미 FTA협정은 끝내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비준 저지'라는 제2전선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또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힘겨운 싸움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내년까진 마친다며 이미 제1차 협상을 끝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경쟁력 제고 대책을 강구하고, "잃게 되는 소득의 대부분을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얘기되고 있는 경쟁력 대책이라는 것도 별 효과도 없던 과거 대책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춤농정'이라고 해봤자 전업농을 규모화하고, 영세 고령농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1일 방영된 매일경제·mbn 특별대담에서, "이제 중국하고의 FTA도 불가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완전개방' 국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복지를 강화한다고 해도 농민이 바라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 겁니다. 피해보상은 과거 3년 평균가격의 80%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시세와 차액에 대해 80% 또는 85% 보상 운운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은 전업종과 준전업농, 창업농 등에 대해 과거 3년 평균 조수입의 80%를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안도 '본전'에도 한참 못 비치고, 갈수록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농민들의 삶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게 너무 뻔합니다.

우리 농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은 수년 내에 우리보다 영농규모가 100배나 더 큰 미국, 20~30배나 더 큰 EU, 우리보다 생산비가 5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한 중국과 아

‘21세기 우리 농업의 희망, 한농연’ 그중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계시는 회장님과 임원님들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시겠습니까? 문제는 모두들 말로는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농정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긴 한-미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이 기껏해야 연평균 6700억 원밖에 안 된다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을 기대하겠습니까?

거기다 우리 농업·농정이 이대로 흘러간다 해도 손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도 손해가 없고, 농협 임직원에게 손해가 없고, 공사 임직원에게도 손해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의 확대로 소득이 올라가고,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 값까지 내려가니 ‘두 배’로 좋아지는 겁니다. 오로지 농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농민들이 나서서 농업·농정의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농업·농정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망의 농업을 희망의 농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농업·농촌의 주역, ‘21세기 우리 농업의 희망’인 한농연이 이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암울한 우리 농업을 희망의 농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농업, 희망의 길’은 다음 세 가지 중요 정책과제의 실현에 있음을 저는 다시 한 번 되풀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농민들은 품목별 또는 특정지역별로 조직화하여 뉴질랜드 농민들이 만든 ‘체스프리 인터내셔널’이나, 유럽의 농민들이 만든 ‘국가 단위 품목조합 같은 국제 경쟁력 있는 회사나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가 개인별로 아무리 영농규모를 키우

고, 지역조합이 아무리 경제사업을 잘해도 외국의 농산물 수출업체와는 상대가 안 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교섭에서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농민끼리 서로 손해 보는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예산은 이런 회사나 조합을 만드는데 ‘조건없이’ 투입해야 합니다. 품목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도 회사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나 조합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소유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당연히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자기의 회사나 조합에 ‘물지마’ 판매 위탁을 해야 합니다. 농협의 그 많은 사람과 자산도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2)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므로 농업소득만으로 높아지는 국민 일반의 생활 수준을 따라 잡거나 앞설 수 없습니다. ‘농한기’에 농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농촌관광이나 농촌휴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적합한 숙박시설 등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센터와 농촌공사는 이런 특별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 그리고 품목별 고도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센터는 국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3) 직접지불의 지불 근거와 기준을 피해보상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생활의 격차를 없애는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에 바탕을 둔 직접지불로는 농민이 결코 잘살 수 없습니다. 유럽처럼 우리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직접지불을 늘려 갈 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과 가치를 국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만들고, 농심은 훈훈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경쟁력 있는 회사 또는 조합의 육성, 농외소득 및 직접지불의 증대정책은 우리 농업과 농민이 '완전개방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들 과제 이외에도 부채문제, 농신보 한도 소진문제, 빈번한 재해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많은 과제들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해 왔던 부채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쉬운 것으로 생각되는 추가지원사업 시행규정 중 개선요망 사항도 아직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농협의 사람과 자산을 품목별 농민들의 회사 또는 조합으로 재배치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농민들을 품목별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농민들의 품목별 조직화에 예산을 '조건 없이' 투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술센터를 국가기관화하고, 기술센터와 농촌공사를 품목별 전문기술 및 농촌관광 경영노하우 교육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직접지불의 지불근거와 기준을 도농생활격차의 해소에 두고 계속 늘려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는데 적극 동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회장님, 임원님. 이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

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해도 지금처럼 걱정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농업의 자연적인 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으며, 시장여건은 최상입니다. 농가별 영농규모는 작지만 최고의 협동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마케팅능력으로 무장한 경영조직을 만들어 대응한다면, 결코 시장에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한 소득은 농외소득과 직접지불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주어진 인적·물적 자원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농민의 조직'인 농협에는 2만3천명의 경제사업 전문가가 있고, 5만명 가까운 금융전문가가 있으며, '그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고도 1년에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유통공사에도 1만명 가까운 전문가가 있습니다. 진흥청과 기술센터에는 석사와 박사만 2,500명이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에도, 농촌경제연구원에도 수백 명의 석사와 박사가 있습니다. 농업계 대학과 고등학교에도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6조원"이나 있습니다. 이제 특별대책을 세운다니까 이 금액은 더 늘어나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도 농업을 위한 사람과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돈으로 이룬 것이 겨우 지금의 농정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정을 주도해온 정부, 막강한 조직과 자금을 가진 농협, 결코 적지 않은 전문가와 예산을 가진 농업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불평하며 따라온 농민단체가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농민후계자는 말 그대로 농업·농민의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농민후계

자인 한농연 회원님들은 우리의 권리가 어디까지이며, 우리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고 행동해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 농업과 농민을 '희망의 길'로 이끄는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국내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100% 개방, 완전 경쟁'이라는 시장의 속성과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우리가 어떤 수단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 모두가 우애 깊은 형제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목소리를 높여봤자 목만 아플 뿐 메아리도 없을 겁니다! 목표의식과 결속력이 없는 조직은 허수아비로 취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12만 회원이 진정으로 소망하며 함께 행동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바탕은 교육과 토론입니다.

시도, 시군구별로 교육과 토론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시고, 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회장님, 임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십시오. 저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전자우편(e-mail)으로 아래의 부탁말씀과 함께 교육과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보내드렸습니다.

① 회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부방 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행정당국에다 필요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 교육에는 '농민후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실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저희 연구소가 주관하는 '추가지원 대상자 교육'에도 한 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작년 에 못 왔던 분들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③ 앞으로 지역에서의 공부모임과 조직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회원'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2박3일 이상, 가급적이면 품목별로, 토론과 강연실습 등을 겸한 교육과정을 짜서 선을 보이겠습니다. 물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빛을 보게 되겠지요.

④ 지도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은 정보화시대 최고의 편리한 수단인 인터넷과 E-mail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배우기도 정말 쉽습니다. 영농기술에 대해 알고 싶으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거기다 글을 올리기만 됩니다. 농업 또는 농정관련 불편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농림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거기다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농연 동향은 한농연 홈페이지(<http://www.kaff.or.kr>)를 방문하시면 되고, 저의 글과 관심사항은 제 블로그(<http://blog.joins.com/leehm8>)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작년 교육 때 E-mail주소를 가진 분이 너무 적은데 놀랐습니다)

농업·농민, 그리고 한농연을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 임원님, 한농연은 스스로 '21세기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우리 농업을 희망의 우리 농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한농연은 펼쳐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과 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